

##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한 대한민국



김국진  
건설경제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이 완벽한 사회보장제 도입을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며,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정책의 지향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태내에서 천국까지’란 목표까지 내걸었다.

70년이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부터 전 국민을 ‘멘붕(멘탈 붕괴)’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 경기 시화공단·고양버스터미널·장성 요양병원·서울지하철 도곡역·동대문 홈플러스 화재에 이르기까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처지다. 수학여행

이 아름다운 추억에서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었고 ‘고3병’을 뚫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해도 첫 환영식인 O.T(오리엔테이션)를 걱정해야 한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취업문을 뚫어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휴일에 가족들과 들르는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불안감이 엄습한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낸 후 요양병원에서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람들을 만날 때 형식적으로 주고받은 ‘안녕(安寧, 아무 탈 없이 편안함)하십니까’란 인사가 절실하게 다가온다. 국가 차원에서 ‘굿판’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느냐는 말부터 수십 명 죽는 사고는 사고축에도 못 낀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초고속성장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간과한 안전불감증과 빈부격차를 지목한다. 잇따르는 대형사고 대다수가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이거나 불평등에 좌절된 소외층의 화풀이였던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격인 국가안전처 신설과 각종 비리를 자행하는 관(官)피아 척결에 주안점을 둔 '국가개조'를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추진하고 관피아, 공피아마저 뿌리뽑을 기세다. 국가개조의 출발점은 안전을 위협·저해하는 이런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잃어버린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복원이어야 한다.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안녕은 없기 때문이다.

건설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개조가 가장 시급한 쪽이다. 최근 서울시의 한 건설담당 고위 공무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안 쓴 근로자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바로 옆의 안전모를 집어드는 대신 숨어버리더라고 말하며, 탄식했다. 불편한 안전모를 쓰느니, 차라리 숨는 게 자연스러운 게 건설안전의 현 주소란 생각 때문이다. '설마 별일 없겠지'란 막연한 믿음 아래 기본수칙들이 무시되면서 안전과 관련해 수십년간 축적된 수백~수천개 규정과 매뉴얼마저 무력화 됐다.

뿌리박힌 안전불감증을 바꾸려면 건설인의 자각이 우선이다. 사람을 위한 시설·건축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200만 건설인들이 뺏속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나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규제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의 터무니없는 공사비가 원·하도급, 2차 협력사, 건설근로자를 거치면서 더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떤 규제로도 시공 후의 안전은 고사하고 시공 중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안전을 기대하

는 것은 정부의 욕심일 뿐이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자'에 '제값 주기'를 실행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비정상적인 안전규제의 정상화도 절실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건설현장에서 술한 사고들이 터졌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연평균 5곳이 채 안 되는 48곳(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이다. 현장을 책임지는 종합건설사 중에 영업정지를 받은 곳은 10년간 단 2곳이 전부다. 이 정도라면 법령이 비현실적이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과연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형건설사의 문을 닫는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항공사 사장단과 만나 강조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현실과 괴리된 과잉처분과 법적 소송 간 악순환 고리도 끊어야 한다.

관피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원인 마피아(Mafia)의 원래 뜻은 '아름다움', '자랑'이라고 한다. 'Public servant(공공의 하인)'로서 국민의 자랑거리가 돼야 할 공무원이 민관유착의 고리로 범죄집단화 되선 안 된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책은 시장이 관피아를 요구하도록 만드는 '관치'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는 건설인들이 그 동안 소홀했던 안전의식을 다잡는 절호의 기회다. 200만 건설인도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산업의 명예를 영원히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정한 투자와 현실적 규제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